

## 오피니언

## 데스크 시각

박 치 경



“우리가 목말라 했을 때, 우리가 배고팠을 때 어느 누가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먹을 뺨을 주었습니까? 현실에 굴복하여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하더라고...”

최근 총장 직선제 학적개정을 밟아하며 김윤수 전남대 총장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애절했다. 1988년 대학 민주화의 선봉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전남대 이었기에 이를 포기하는 구성원들의 비애감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졌다.

## 구태 탈피가 진정한 개혁

직선제 존치 반반투표에서 교수 70% 가 찬성한 상태에서 ‘응단’을 내린 김 총장의 고뇌도 적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목포대 역시 공모제를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전국 대학의 총장 직선제는 사라지게 됐다.

전남대가 학문적 자부심과 함께 대학민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지를 자임했던 터라 ‘투쟁의 산물’인 직선제를 포기해야 하는 김 총장과 구성원의 소회는 남다를

것이다. 명분을 틸어내 직선제를 고수하자는 당장 정부의 지원 제외 등으로 닥쳐오는 ‘외압’ 고민에 현실을 받아들이며 곱씹었을 자파감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전남대는 학적개정을 통해 일단 19대

새로 뽑게 된다면 몇 가지 되새겨보아야 할 게 있다. 그야말로 ‘마지막’ 직선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남대가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일단 다시 한 번 직선제가 실시된다는 가정하고 겸찰 수사까지 부른 ‘구태’를 되씹어 보자. 우선 상식적으로 이번 수사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식사와 항응, 골프모임 등 음성적이고 타락한 선거운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남은 문제는 뿌리깊은 ‘연고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다. 특경 고교

있는 인물이더라도 소속 단과대학 교수 수자가 적으면 표 대결에서 한 수 접어야 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설부론은 결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차피 19대 새 총장 후보를 마지막 직선으로 치르게 되는 상황이 돼 “딱 한 번만 눈감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악습은 뒤플이될 것이고, 직선제 폐지 선언은 ‘눈가리고 아옹’이었다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성공 관건은 개방 마인드

공모제 도입도 능사만은 아니다. 직선제 폐단을 없애고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들도 꼭 넓게 받아들이자는 게 공모제 취지다.

광주·전남 지역성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평가는 따르는 만큼 대학 내부부터 얼마나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가 성과를 가릅니다. 현실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결치려 공모제를 취해 놓고, 본질을 비켜간다면 직선제보다 더 심한 ‘종양’을 키울 뿐이다.

지성 집단으로서 전남대는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어렵사리 직선제 폐지를 결정하고 공모제를 선택한 시점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개혁에 대한 ‘진정성’뿐이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직선제 폐지, 함께 버려야 할 것들

총장 후보까지는 직선제로 가고, 차기 총장부터는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과부의 19대 총장 인선 방향은 예단하기 어렵다.

교과부가 총장선거 2순위로 임용 추천된 이병택 교수(공대)를 낙점하자, 16일 끝나는 현 총장 임기 내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교무처장 직무대행제로 같지 않은 미지수다. 여기에는 직선제를 통해 새로운 총장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만일 직선제를 통해 19대 총장 후보를

인맥에 따른 출서기와, 당선 후 보직 나눠 먹기 구습을 뿐이라면 정말 실망이된다. 지역의 ‘양대 명문고’를 중심으로 뜻을 둘러 밀어주는 학연선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총장감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인가가 직선제 폐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관건이다.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는 교수 100명이 넘는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에서 후보가 출마하면 당선권에 균접하는 행태가 이어졌다. 중앙정부와의 인맥이 두텁고, 대외 활동 능력이 있어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가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의식의 깊은 골과 미주한 제2의 도가니가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이함은 있어도 모든 장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

세계 속에 인권의 도시로 우뚝 서 위상을 날리고 있는 광주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 실질적인 인권감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은펜칼럼



서 미 정

연이는 불별다위가 한창인 요즘 필자가 운영하는 사랑모아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이쁜 아침부터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바빠 움직인다. 이용자들이 등원하기 전 비록 이용공간이 비좁고 불편함은 있지만 하루를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미리 켜놓고 등원하는 이용자를 맞이하고 한여름 땅볕이 내리쬐는 더위를 피해 나무그늘과 가까운 계곡 등의 시원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여름날씨만큼 속이 답답하고 덥다. 지난 2월, 광주일보 은펜칼럼에 ‘갈 끝 없는 장애인시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었다. 주간보호 이용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을 계획하고 건물과 신축부지를 알아보고 다니며

## 인권도시 광주, 여전한 장애인 ‘님비’

경험했던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님비현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1년여 만에 적합한 땅을 매입하고 6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수개월 동안 표류중이다. 신축부지 앞에 ‘결사반대! 주택기에 장애인시설이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 이웃에 장애인들이 사는 게 싫다’, 3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아주머니는 필자를 몇 번 마주치지 않았지만 필자(지체장애 3급)의 보행모습을 벌써부터 아들이 흉내를 내어 안 되겠다고 한다.

‘땅값이, 집값이 떨어진다’

‘아이들의 교육상 안 되겠다’

‘장애인인 함부로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줄 것 같아 안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 돌멩이를 던질 것 같아 안 되겠다’

소그룹 거주시설인 그룹 홈 식구들이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으니 안 되겠다. 등등의 합리적이지도 명분도 없는 이유들을 대면서 안 된다고 한 한다. 그리고는 대체부지를 알아보라고 한다.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법적인 절차는 이미 이의없음으로 6월에 신축 허가를 처리할 단계였지만 주민민원발생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추진하자는 내용을 필자에게 제안하여 이미 몇 차례 허가를 연기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져보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와 설득을 하는 과정도 몇 차례 거쳤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대는 여전하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

전국으로 확대 실시코자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부정당·부적격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보다 우수한 양질의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aT 시스템’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 성공한 국정과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지식 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eaT 시스템’의 우수성과 효율성은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참여율로도 나타나고 있다.

‘eaT 시스템’의 운영 초기인 2010년 9월에는 5개 시·도 250여 개 학교가 참여한 정부도 불과했지만, 2012년 7월 말 현재는 전국 15개 시·도 3099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거래실적은 4500억원에 이르고 있고, aT는 올 연말까지 참여 학교수를 35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aT가 직접 입점심사나 학동점검시 위생단속에도 관여하게 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장〉

## 안전한 농산물로 건강한 학교급식 만들자

되고, 업체로서도 매번 관련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해야하는 불편함도 해소되어 상호간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돼 급식과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인근지역 내 학교들이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수 있어 개별 학교가 단독 구매할 때보다 약 10%의 가격인하 효과도 있다.

학교급식 조달체계의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역시 안전성 확보에 있다. 중개거래 역할을 하는 eaT의 운영자인 aT는 식품전문 공공기관으로서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공급업체 관리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도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eaT에서 진행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상의 제출되는 서류와 시설의 적법성을 직접 점검해 학교 및 교육청에서 이를 근거로 학교의 특수사항에 맞는 적정한 업체를 선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만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업체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보관시설을 타업체와 공유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재제가 어렵고, 냉동·냉장 탑재의 운도 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적합은 운도 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aT는 정부기관, 교육청, 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법적 기준 이외에 전자조달 참여자격 강화를

위해 교육청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기준을 강화해 가고 있다.

또한 식품 의약품안전청,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각 기관의 단속 및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 부적

급식업체를 적시에 제재하기로 했다.

지역별 학교급식 업무협의회 구성으로 정기 학동점검도 실시하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부정입찰 및 위장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현장심사에는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나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까지 참여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aT가 직접 입점심사나 학동점검시 위생단속에도 관여하게 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장〉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오피니언

## 시설

## 영산강도 녹조 ‘위험수위’ 대비책 있는가

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의 주요 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영산강도 위험수위를 치닫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식수원인 주암호와 동복댐 일부에서 녹조군이 발전과 환경당국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영산강에 내려진 수질에 ‘주의’ 단계가 7일 현재까지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당시 녹조 류로로필-a 농도는 71.2mg/m<sup>3</sup>, 낮조류 개체수는 3천725개/ml에 달한다. 빌령 기준인 15mg/m<sup>3</sup>, 500개/ml를 크게 초과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중 ‘주의’ 단계가 내려진 것이다.

영산강은 상수원이 아닌 농업용으로만 쓰고 있으나 녹조가 심화될 경우 농업용으로의 사용도 어렵다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건 지역 최대 상수원인 주암호와 동복댐에서도 녹조군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상수원의 녹조에 대비, 고도정수처리 시설 확대 등 종장기 대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식수원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최근 층정한 동복댐의 류로로필-a농

자를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기업들이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유인할 인센티브 등에 솔직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랜드가 박람회장에 쇼핑몰과 리조트, 숙박시설을 건설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고, 코레일도 민간기업과 손잡고 박람회 역세권 개발 및 국제관 등을 개조해 연수원 시설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들 기업이 투자 결정을 미루는 등 사후 활용의 구체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후 활용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사 설립안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수천억 원의 정부 차입금을 해결하는데도 용이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후 활용 확정 시 까지 시설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후속지원이 절실히 하루이다.

문제는 일부 부처에서 주가투자에 대한 부담